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목 차>

1. 재무제표 심사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작 성 자	이름	김세화
	담당부서 (과)	공정시장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박민우 자본시장국장		연락처	02-2100-2693
	과장	류성재 기업회계팀장		이메일	fsc0174@mail.go.kr

2023. 09. 12.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재무제표 심사시 협조 요청 근거 마련								
	2.규제조문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의라								
	3.위임법령	해당 없음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9.22~2023.10.04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충분한 자료확보가 어렵고, 자료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심사가 지체됨에도 감리로 전환할 수도 없어 심사업무 수행이 사실상 불가능 ⇒ 재무제표 심사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회피할 경우 감리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할 필요								
	7.규제내용	○ 재무제표 심사시 감리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피규제집단)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대상 회사 <table><tr><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tr><td>피규제자</td><td>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대상 회사</td><td>‘23년 연간 기준 640사 예정(금융감독원 276사, 한국공인회계사회 364사)</td></tr></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대상 회사	‘23년 연간 기준 640사 예정(금융감독원 276사, 한국공인회계사회 364사)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재무제표 심사대상으로 선정된 외부감사대상 회사	‘23년 연간 기준 640사 예정(금융감독원 276사, 한국공인회계사회 364사)								
9.규제목표	회사의 협조 불응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심사가 장기간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하여 시정 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	×	×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당사항 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감리집행기관은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무제표 감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감리등의 착수) ① ----- ----- ----- -----.
2. 재무제표 심사를 수행한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설〉	라.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리집행기관의 협조 요청에 대하여 회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3회 이상 응하지 않아 재무제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외감규정」 개정으로 재무제표 심사제도^{*1}가 도입되었으나 「외부감사법」상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2},

*1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등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한 회사의 소명을 들은 후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제표의 수정을 권고하는 업무(「외감규정」§23①1.나)

*2 法§27①에 의한 자료제출요구를 할 수 있는 업무는 法§26①의 업무(감사보고서 감리, 재무제표 감리, 품질관리 감리·수준평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인데, 심사는 동 업무에 포함되지 않음

- 이로 인해 회사의 임의적인 협조에 기한 소명자료를 받는 방법으로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
- 회사가 자료제출에 비협조적인 경우 충분한 자료확보가 어렵고, 자료확보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심사가 지체되는 경우가 발생
- 또한, 회사가 자료제출을 회피한다는 이유로 감리로 전환할 수도 없어 회사가 자료제출에 의도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심사업무수행이 사실상 불가능
- 실제로 변호사 조력 등을 받아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지연·거부하는 등 규정의 미비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정상적인 재무제표 심사업무수행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음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감리집행기관이 재무제표 심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회사에 자료제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음에도,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러한 협조요청에 3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감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한국공인회계사회	동 개정안 마련 과정("23.6~7월) 에서 의견수렴	재무제표 심사의 신속성·완결성 보완을 위한 개정방향에 동의	협의를완료

3. 규제목표

- ☐ 회사의 협조 불응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심사가 장기간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고,
- 회계처리기준 위반 여부를 보다 신속히 확인하여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회계정보 이용자를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 재무제표 “심사”에서 “감리”로 전환하는 경우 임의적 협조를 거부하는 회사에게 자료제출의무가 부과*되므로 자료의 확보가 가능

* 감리집행기관은 “감리” 과정에서 회사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외부감사법 제27조),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시 행정 제재 및 형사처벌 가능(동법 제29조제1항제4호, 제42조제6호)

-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한정하여 재무제표 “심사”를 “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 규정의 남용도 방지

⇒ 회사의 협조 불응으로 인한 재무제표 심사의 지체 방지라는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회사의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최소화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	×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 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 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 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 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 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해당 없음

○ 타법사례

해당 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본 규제는 재무제표 “심사”과정에서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감리 집행기관의 협조요청에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감리집행기관이 재무제표 “심사”를 “감리”로 전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감리”전환의 요건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감리”전환시 감리집행기관의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음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 한하여 “감리”로 전환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게 감리전환에 대한 충분한 예측가능성 및 책임이 있어 회사의 규제준수 가능성도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운영되고 있는 심사·감리제도의 보완방안이므로 집행상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됨

○ 재정적 집행가능성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특이사항 없음

2. 향후 평가계획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이후 동 방안이 충실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예정

3. 종합결론

- ☐ 본 규제는 회사의 협조 불응으로 인하여 재무제표 심사가 장기간 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실시 근거를 규정하는 것으로,
-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3회 이상 협조 불응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되므로 회사에게 감리전환에 대한 충분한 예측가능성과 책임이 있고,
 -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 등을 위해 감리착수 前 재무제표 심사를 거치도록 한 것이므로 회사의 협조 불응으로 이러한 심사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 회계처리기준 위반여부를 신속히 확인하여 시정조치 등을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자 등 회계정보이용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비용보다 편익이 큰 타당한 규제라 판단됨